

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경제부총리 모두발언(7.12)

☐ 지금부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.

☐ 조금 전 발표된 고용동향에 따르면,
6월 기준 고용률은 63.5%로 역대 최고를,
실업률은 2.7%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였으며,

○ 취업자수도 전년동월대비 33만 3천명 증가하며
28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하였습니다.

* 취업자수 증감(전년비, 만명): ('23.1)41.1 (2)31.2 (3)46.9 (4)35.4 (5)35.1 **(6)33.3 (上)37.2**

○ 상반기 기준으로 역대 최고 고용률 62.2% 및
최저 실업률 3.0%를 기록하는 등
고용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.

* 6월 고용률은 월별 통계 작성('82.7월) 이후 최고, 실업률은 실업기준 변경(1~4주, '99.6월) 이후 최저
상반기 고용률은 고용통계 작성('66.1분기) 이후 최고, 실업률은 실업기준 변경(1~4주, '99.6월) 이후 최저

☐ 최근 취업자 수는
대면서비스·정보통신·전문과학기술업 등에서의 고용 증가와
여성·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등으로
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만,

○ 여전히 산업현장에는 빈일자리가 지속되는 등
업종에 따라 노동시장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습니다.

☐ 정부는 최근의 고용 호조세가 더욱 공고화될 수 있도록
근로여건 개선과 외국인력 활용 등을 통해
현장의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.

[❶ 제2차 빈일자리 해소방안, ❷ 선원 일자리 혁신방안]

☐ 오늘은 먼저 빈일자리 해소방안과 선원 일자리 혁신방안에
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.

□ 정부는 지난 3월, 인력난 호소가 큰 제조업, 물류·운송 등 6개 업종*을 중심으로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마련한 데 이어,

* 제조업(조선, 뿌리), 물류·운송, 보건·복지, 음식업, 농업, 해외건설

□ 이번에는 해운업·건설업 등 4개 업종에 대한 맞춤형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습니다.

① 먼저, 해운업은 우수한 선원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장기근속 유인을 강화하겠습니다.

- 현재 월 300만원인 외항상선과 원양어선 선원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금액을 상향하고, 복지지원을 위한 선원발전기금을 신설하는 등 선원의 실질소득 증대를 지원하는 한편,

-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어 승선기간 단축 및 유급휴가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.

② 건설업은 열악한 현장 작업여건 개선에 중점을 두어 휴게실·탈의실 등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공공기관 우선 적용 후 민간에 확산해 나가고,

- 건설기능인 등급별로 맞춤형 교육과 일자리 매칭을 지원하겠습니다.

③ 수산업은 어선원의 안전복지 강화에 집중하여 모든 어선으로 어선원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한편, 노후 위판장의 현대화와 어선 내 복지공간 확보 등 작업환경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.

④ 폐기물처리 등 자원순환업은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폐기물 시설 현대화 등 작업환경을 개선하고, 자동화·집적화된 지역별 거점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지역청년 등 신규인력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.

- 아울러, 빈일자리 해소를 위한 전반적인 지원제도도 적극 개선하겠습니다.
- 육아휴직·출산휴가 등 자녀양육 제도 활용도가 높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,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일자리 매칭지원을 강화하는 한편,
- 외국인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하반기 중 숙련기능인력(E-7-4) 쿼터를 5천명에서 3만 5천명으로 대폭 늘리고, 단순외국인력(E-9)도 내년도 쿼터 확대와 허용업종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.

[③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운영 방안]

- 다음은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운영 방안입니다.
- 그동안 지역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재정을 투입해왔으나, 수도권-비수도권 간 격차와 지역 소멸 우려는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.
- 이에 정부는 현재와 같은 재정 의존 소규모 투자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주도의 지속 가능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재정과 민간자본 그리고 금융기법을 결합한 새로운 투자방식을 도입하고자 합니다.
- 지역이 원하는 프로젝트를 민간 전문가들이 수익성, 지속가능성 등을 기반으로 최종 결정하고, 재정과 민간자본으로 구성되는 '지역활성화 투자 펀드'를 통해 재원을 지원하겠습니다.
- 중앙정부,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출자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 모(母)펀드를 조성하여 민간과 지자체가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만든 자(子)펀드에 투자하겠습니다.

- 사업시행자는 펀드 자금과 함께 금융기관에서 PF대출을 받아 대규모 융·복합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.
- 정부는 후순위 투자, 대출 특례보증, 규제 개선 등 민간자본 유입을 위한 다중물 역할을 하고,
 - 지자체는 사업주체로서 사업을 발굴·기획하면서 인·허가 단축 등을 통해 사업추진을 가속화함과 동시에 발생한 사업수익을 지역 주민·사회에 환류하게될 것입니다.
-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지역활성화를 타겟팅한 최초의 정책펀드입니다.
 - 민간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을 활용하기 때문에 국고보조금 체계상 지방이양 사업도 포함되며,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도 제외되어 보다 시의성 있는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입니다.
- 그동안 정부는 수개월간 지자체, 민간 금융전문가 등과 실무 논의를 밀도있게 진행해왔으며,
 - 에너지 융·복합 클러스터, 복합 관광 리조트 등 다양한 유형의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이 펀드 방식을 통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
 - 올해 하반기에 펀드 출시 및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사전 준비를 마무리하여, 내년 1/4분기 중에는 펀드 투자 프로젝트가 실제 발굴되도록 하겠습니다.
- 이어서, 안건과 관련하여 고용부 장관님, 해수부 차관님의 자세한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.
(고용부 장관, 해수부 차관 모두발언)
- 지금부터는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.